

(2018. 5. 19 시행) 지방교육청 9급 기출문제 [사회(A책형) 해설]

[장 수 원 선생님]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남대앞)중앙로점 www.okpass.com

※ 총평

최근 치뤄진 교육행정직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중하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2016년 교육행정직 시험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평가됩니다. 사회문화는 대체로 쉬운 편이었습니다. 경제는 특히 9번(시장의 균형과 사회적 잉여,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 다루어지는 문제로 많은 학생들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12번(실질 GDP 증가율 계산)의 경우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법과정치에서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16번), 형사 절차(19번), 국가 기관의 상호 견제(20번)에 관한 문제가 다소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90점 이상의 점수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연 현상, ㉡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 ① (X) 자연 현상(㉠)은 인간의 가치나 신념과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 ② (O)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나타나는 특성을 지닙니다.
- ③ (X)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릅니다.
- ④ (X)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에 예외가 존재하여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확률의 법칙).

2.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이해의 관점

A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며, B와 C는 (가)의 질문에 따라 자문화 중심주의 또는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 ① (X) 문화 상대주의(A)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며, 문화 간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 ② (X) 자기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가)에서 '자기 문화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가?'라고 한다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입니다.
- ③ (X)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가)에서 '선진 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인가?'라고 한다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입니다.
- ④ (O)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이므로, (가)에서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가?'라고 한다면, B는 문화 사대주의, C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것입니다.

3.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제시문에서 사회가 개인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속성 강조 한다는 것으로 보아 사회 실재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X) 사회를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 ② (X) 사회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 ③ (O) 사회 실재론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④ (X) 사회적 문제나 구조적 문제의 모든 원인을 개인에서 찾는 것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4.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 - 낙인 이론

제시문은 전과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① (O)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후속 일탈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차적 일탈(비교적 가벼운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2차적 일탈(중대한 일탈)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② (X)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합니다.
- ③ (X) 일탈 행동은 지배적인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합니다.
- ④ (X)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탈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5.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대치를 강조하는 사회 보험, (나)는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사후 대응적인 대치를 강조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합니다.

- ① (O) 사회 보험(가)은 본인이 낸 보험료가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본인이 혜택을 보기도 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는 성격을 갖습니다. 반면 공공 부조(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② (X) 공공 부조(나)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수혜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반면 사회 보험(가)은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X) 사회 보험(가)과 공공 부조(나)는 모두 금전적·경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비경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X) 사회 보험(가)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자가 수혜 대상자이고, 공공 부조(나)는 경제적 생활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 부조(나)는 사회 보험(가)보다 수혜자의 범위가 좁습니다.

6.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화, 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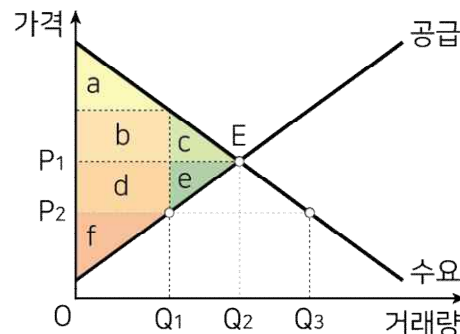
- ① (X) 가족은 친밀감에 기초하여 구성원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집단 1집단입니다.
- ② (O) 아버지는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성취 지위에 해당합니다.
- ③ (X) 학교(☹)는 사회화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합니다.
- ④ (X) 시청(㉠)은 그 목표와 경계가 뚜렷하고,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규범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규정된 집단으로 공식 조직에 해당합니다. 한편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식 조직과는 별도로 조직 내에서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 활동을 위해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자발적으로 형성한 사회 집단을 의미합니다.

7.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최고 가격제의 이해

- ① (X) 정부는 시장 균형 가격(P_1)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 가격(P_2)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최고 가격제로 가격 상한제에 해당합니다.
- ② (X) 가격 상한제(최고 가격제)는 규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 ③ (X) 그림에서 P_2 를 규제 가격으로 하는 가격 상한제(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공급량은 Q_1 , 수요량은 Q_3 이므로 $Q_3 - Q_1$ 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③번 해설의 그림에서 가격 규제 이전의 사회적 잉여는 $a+b+c+d+e+f$, 가격 규제 이후의 사회적 잉여는 $a+b+d+e$ 로 나타납니다. 이는 가격 규제에 의해 사회적 잉여가 $c+e$ 만큼 감소하였다는 것이며, 가격 규제에 따라 X재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출제영역] 합리적 선택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을 말하므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를 최대화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때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매물비용(㉢)을 고려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매물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할 비용입니다.

9.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과 사회적 잉여,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 ① (O) 소비자 갑, 을, 병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소비자 편익)과 생산자 가, 나, 다의 최소 요구 금액(=생산자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균형 가격은 8,000원, 균형 거래량은 3개입니다.
- ② (O)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시장 가격)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생산 비용)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자	실제로 받은 금액	최소 요구 금액	생산자 잉여
가	8,000원	6,000원	2,000원
나	8,000원	7,000원	1,000원
다	8,000원	8,000원	0원
총생산자 잉여			3,000원

따라서 소비세 부과 전 총생산자 잉여는 3,000원입니다.

- ③ (X)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실제로 지불한 금액	소비자 잉여
갑	10,000원	8,000원	2,000원
을	9,000원	8,000원	1,000원
병	8,000원	8,000원	0원
총소비자 잉여			3,000원

한편 소비세 부과 후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9,000원으로 상승했다고 하였으므로, 소비세 부과 후 소비자 잉여를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최대 지불 용의 금액	실제로 지불한 금액	소비자 잉여
갑	10,000원	9,000원	1,000원
을	9,000원	9,000원	0원
병	8,000원	소비하지 않음	0원
총소비자 잉여			1,000원

따라서 소비세 부과에 따른 총소비자 잉여 감소액은 2,0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소비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 갑, 을과 생산자 가, 나가 거래에 참여할 것이므로, 균형 거래량은 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X재 1개당 2,000원의 소비세를 부과 하므로, 이때 정부의 조세 수입은 4,000원(=2,000×2)입니다.

10.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갑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 정책을, 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① (X) 소득세율 인하 정책은 재정 확장 정책이므로, 갑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 ② (O) 재할인을 인상 정책은 금융 긴축 정책이므로, 갑은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
- ③ (X) 법인세율 인상 정책은 재정 긴축 정책이므로, 을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 ④ (X) 국채 매각 정책은 금융 긴축 정책이므로, 을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11.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VI. 경제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율(=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t{실질 이자율} = \text{명목 이자율} - \text{물가 상승률}$$

A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높으므로 실질 이자율이 음(-), B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낮으므로 실질 이자율이 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① (X) B 구간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양(+)으로 나타나므로, 상대적으로 B 구간에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 ② (X) B 구간에서 실질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택 담보 대출 수요는 감소할 것입니다.
- ③ (X)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야 할 것입니다. ②번 해설과 같은 맥락에서 B 구간에서 자금 대출에 따른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높아지므로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도 감소할 것입니다.
- ④ (O)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예금의 구매력이 높아집니다. 즉, 이를 통해 예금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많아지므로 가계는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 예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12.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V.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명목 GDP와 실질 GDP

실질 GDP를 구하는 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ext{실질 GDP} = \frac{\text{명목 GDP}}{\text{GDP 디플레이터(혹은 물가 지수)}} \times 100$$

이를 통해 2012년과 2014년의 실질 GDP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실질 GDP (조 원)	$1,200 \left(= \frac{1,260}{105} \times 100 \right)$
2014년 실질 GDP (조 원)	$1,500 \left(= \frac{1,650}{110} \times 100 \right)$

따라서 실질 GDP 증가율(=경제 성장률)은 $25\% \left(= \frac{1,500 - 1,200}{1,200} \times 100 \right)$ 입니다.

13.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VI. 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가)는 비정부 기구, (나)는 정부 간 기구, (다)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 ① (X) 국제 엠네스티(=국제 사면 위원회(AI))는 비정부 기구(가), 그린피스는 비정부 기구(가),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기구(나)에 해당합니다.
- ② (X)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비정부 기구(가), 세계 무역 기구(WTO)는 정부 간 기구(나),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기구(나)에 해당합니다.
- ③ (O) 그린피스는 비정부 기구(가),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기구(나), 프랑스는 국가(다)에 해당합니다.
- ④ (X) 세계 무역 기구(WTO)는 정부 간 기구(나), 국경 없는 의사회(MSF)는 비정부 기구(가), 캐나다는 국가(다)에 해당합니다.

14.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부 형태

문제에서 갑국과 을국의 정부형태가 전형적인 정부형태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에 한정하지 말고,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활용하여 어떠한 성격의 정부형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① (X) 갑국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행정부(내각)를 불신임하여 총사퇴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 ② (X)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총책임자인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함께 갖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행정부가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갑국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은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하지만, 행정부가 의회에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으며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점,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점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즉,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③ (X) 을국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국가원수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 내 다수 세력이 내각을 구성한다는 점,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보다는 의원 내각제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④ (O) 갑국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을국에서는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국의 의회가 갑국의 의회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15.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구제, 대표제

- ① (X) 제시문에서 갑국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약 3배 많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 선거구의 인구가 약 3만 명이라면,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인구는 약 1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도시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3만분의 1, 농어촌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는 1만분의 1이 되어 농어촌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도시 지역 선거구 유권자의 표의 가치의 3배가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즉,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 ② (O) 갑국의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갑국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50명의 선거구에서 50명의 의원을 선출하므로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 정당투표에서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X)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의 경우 군소정당이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하여 당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비례대표제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게 되므로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갑국의 경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전국 단위 정당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방식이 군소정당에 유리합니다.

- ④ (X) 비례대표제의 경우 군소 정당에도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배분하는 전국 단위 정당 투표 선출 의원 수를 늘린다면 의석을 획득한 정당의 수가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의 이해

- ㄱ. (X) 민사적 책임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에게 이러한 책임 능력이 없으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 책임능력은 사람의 분별력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획일적·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만 12세 정도를 그 경계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중학생인 갑은 일반적으로 만13세~만15세 정도일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ㄴ. (O)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 고의 또는 과실, 가해 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갑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직접 가해자인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직접 가해자인 갑에게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의 감독자에게도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ㄷ. (O)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기에 갑에게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에게 책임능력을 제외한 다른 불법 행위의 성립요건이 인정된다면 갑의 아버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하나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ㄹ. (X)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위법성'과 관련하여 형법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피해자의 승낙과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인 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버님에게도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ㄴ' 해설 참조).

17.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단원 통합(Ⅰ, Ⅱ, Ⅲ 단원)

[출제영역] 정치 참여와 선거

- ① (X) 일정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민주 선거의 원칙 중 보통 선거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② (O) 공무 담임권이란 선거(피선거권)나 시험(공직 취임권)을 통하여 국민이 모든 국가 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직접 대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공무 담임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 ③ (O)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구성된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는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 ④ (O) 대의 민주 정치란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형태를 말합니다. 피지배자(=지배를 당하는 자)에 의한 통치란 이와 같이 대의 민주 정치에서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이들을 통해 통치를 하는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8.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I.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권한

- ㄱ. (O) (가)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으로 헌법 재판소 등에서 법률이나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부분 원칙으로 하며, 그 중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해당 법률은 위헌이 됩니다.
- ㄴ. (X) (나)는 집회의 자유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자유권에 해당합니다. 자유권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아야 보장되고 실현되는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며, 수단적·능동적 권리는 아닙니다. 수단적 권리로는 청구권, 능동적 권리로는 참정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ㄷ. (O) 갑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법원에 (다)를 신청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입니다. 법원이 헌법 재판소에 하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ㄹ. (X) 을은 자신의 선거권이 공권력의 행사(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라)를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라)는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재판인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입니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에 재판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인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과 다릅니다.

19.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위법성 조각 사유, 형사 절차,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 ① (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따라서 회사원 갑이 시민을 폭행한 뒤 도주하고 있는 을을 추격하여 체포한 행위는 체포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② (O) 수사 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체포·구속 적부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현행범으로서 체포된 을은 체포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X) 을은 폭행행위를 한 17세로서 소년법상 범죄 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인 병은 범죄 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 한 후에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경찰인 병이 직접 범죄 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습니다.
- ④ (X)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정은 이미 공소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즉, 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므로,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0.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I.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하는 사면으로서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즉, 일반 사면 동의권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대통령, (다)는 국회에 해당하며, 나머지 (가)는 법원에 해당합니다.

ㄱ. (X)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의 제소로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심판합니다.

ㄴ. (O) 대통령(나)은 국회(다)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합니다.

ㄷ. (O) 탄핵심판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서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을 말합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에는 법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다)가 법원(가)을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합니다.

ㄹ. (X)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헌법 제60조 ①항에 규정된 조약(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 동의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은 국회(다)가 대통령(나)을 견제하는 수단에 해당하므로 대통령(나)이 국회(다)를 견제하는 수단을 의미하는 (B)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